

“규모 7.5 지진 발생, 전원 대피”...전쟁터 같았던 훈련

여수서 열린 2025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켜보니

65개 기관 1500여명 참여...단계별 대응 절차 협업 체계 점검
붕괴 건물 진입 로봇 카메라·드론 구호 장비 등 200여대 활용
구조·화재진압·대피 유도·헬기 이송 등 긴급 구조 역량 강화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원 대피하십시오.”

12일 오후 여수시 수정동 소노캄 호텔 인근, 노란빛을 띤 매캐한 연기가 퍼지자 소방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호텔 옥상에 내려앉았다. 객실 투숙객들이 헬기에 탑승하는 동시에 인근 도로에서는 소방용 순찰 로봇이, 붕괴된 건물 내에는 구조견이 투입돼 부상자를 찾아나섰다. 뒤이어 건물 붕괴,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지시가 잇따라 쏟아지는 가운데 소방관들은 일사불란하게 현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인명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날 여수 소노캄 호텔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이 팽배했다.

소방청이 주관하고 전남소방본부가 주최한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방부를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 소방본부 등 65개 기관에서 1500여명이 참여했다. 헬기와 대용량방사시스템 등 각종 장비 200여대도 투입돼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규모 7.5 지진이 발생해 호텔뿐 아니라 인근에서 복합적인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지진 규모 7.5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강진이다. 소방당국은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여수 거문도 서쪽·서남서쪽 해역에서 5차례, 신안 흑산도 북쪽·북서쪽 해역에서 5차례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가정한 모습은 화면 속 CG와 모형으로 대체됐지만, 현장 공기는 훈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거웠다.

오후 2시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수 오동도 해상 인근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재난문자로 동시에 퍼져나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소노캄 호텔 앞 주차장에는 통제단 텐트가 설치되고, 군 병력은 화재 통제구역에서 인원·차량 출입을 차단하며 경계를 섰다. 상황판에는 ‘건물 균열·

붕괴, 케이블카 비상정지, 거북선대교 손상, 엑스포역 화재사고’ 등 피해 현황이 발빠르게 올라갔고, 각 기관 담당자는 상황 지시대로 투입 인력과 장비, 구조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조정했다.

“호텔 건물 좌측에 붕괴와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 보고가 올라오자, 소방관들은 투숙객 역할을 상대로 대피 유도, 인명 구조, 화재 초기진화를 이어갔다.

고난도 구조 작업도 이뤄졌다. 오후 3시께 “옥상에 중상자가 고립됐다”는 상황이 주어지자, 소방관들은 헬기를 타고 호텔 옥상으로 가 중상자를 들것에 태우고 헬기로 천천히 올려보냈다.

낙석으로 인해 파손돼 천장이 움푹 패인 차량에서는, 우선 물을 뿌려 화재를 제압하고 파손된 자동차 프레임 사이로 부상자를 꺼내는 훈련이 이어졌다.

인근 해상에서는 폭·길이 2m 크기의 드론이 날아가 수면 위 조난자가 있는 지점에 정확한 구명환을 떨어뜨렸다.

대피·구조 작업이 끝나자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탐색이 이어졌다.

구조견이 먼저 무너진 건물 내부를 가정한 공간에 투입돼 잔해 사이 인명 흔적을 찾고, 뒤이어 로봇이 좁은 틈새로 들어가 내부 영상을 보내는 방식이다. 지휘본부 상황판에는 로봇 카메라 화면과 건물 도면, 구조대 위치가 동시에 표시됐다.

탐색 도중, “여수엑스포역에서 열차가 탈선해 화확물질이 유출됐다”는 상황이 주어지자 소방관과 육군 31사단 화생방대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등이 방호복과 측정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이들은 능숙하게 통제선을 치고, 화확물질 누출 지점을 찾아 차단한 뒤 화확물질을 제거해 나갔다.

훈련 시나리오는 이 같은 복합재난으로 여수 일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총 623명 이상 사상자가 난 것으로 설정됐다.

훈련에 참여한 시도 본부, 지자체,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구조·구급, 화재진압, 대피 유도, 헬기



소방대원들이 12일 여수시 수정동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2025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소방 제공)



이날 도심 및 건물 정찰에 투입된 소방 로봇(사진)과 붕괴된 건물 현장 모형에 투입된 구조견이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송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통해 기관별 임무와 현장 협업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복합재난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만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몇 분, 몇 초를 줄이느냐가 도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긴급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해양쓰레기 문제, 정부가 나서 달라”

신승철 전남도의원, 어장 정화선 국비 지원 필요성 강조

전남 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광주일보 10월22일 6면)와 관련,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보고 예산 지원에 인색한 상황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승철(민주·영암

1) 전남도의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4만 5000여t에 달하지만 수거에 필요한 ‘어장 정화선’은 4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다 밑에 가라앉은 해양쓰레기가 심각한데도 전남에는 이를 건질만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정화선이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전남도는 침적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200t급

정화선 도입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자체 업무로 규정하고 국비 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전남 바다는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육상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물론,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깨끗한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를 넘어 도민 모두의 귀중한 자산인 만큼, 정화선 확보는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능 전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대책 가동

광주시는 수험생이 지연 없이 시험장에 도착하도록 13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시와 5개 자치구는 교통 혼잡·소음 민원을 선제 관리하고 대중교통을 증편해 시험장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주 도심 전역에는 종합상황실 6곳이 동시에 운영된다.

공무원과 경찰, 모범안전자 등 18개 기관 543명이 합동으로 교통 흐름과 주차 질서, 소음 통제를 총괄한다.

시내버스 기·종점 14곳과 시험장 주변 지하철역

7곳에는 질서요원 70여 명을 배치해 첫차부터 배차 간격을 점검하고, 시험장 경우 정류소와 지하철출구를 집중 안내한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는 시험장을 지나는 38개 시내버스 노선에 차량을 집중 투입한다.

차량 내부에는 시험장별 정차 정류소 안내를 부착해 환승과 하차 혼선을 최소화한다. 시험장 반경 2km 구간은 교통 유도 인력을 늘려 좌회전·U턴 지점을 분산하고, 반경 200m 구간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에 병목을 줄인다.

수능 당일 공공기관 출근시간은 1시간 늦춘다.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돼 소음 변수를 사전에 차단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배려도 강화했다. 장애인 수험생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전 예약으로 시험장 등·하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실 임박 등 긴급 상황에는 112 신고 시 순찰차 긴급 수송이 가능하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치러지며,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1만 7731명이 40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후 청소년 거리상담·유해환경 단속

수능 이후 늦은 시간까지 도심으로 몰릴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가 같은 날 거리상담과 유해환경 단속을 동시에 가동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3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연합 아웃리치를 펼친다.

현장 보호·상담과 업소 점검을 한 축으로 묶어 일탈과 가출을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을 즉시 보호망

으로 연결하는 ‘투 트랙’ 대응이다.

시와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쉼터 등 11개 기관 70여 명이 참여해 거리 배회 청소년을 만나 상담과 귀가지도를 진행하고, 청소년전화 1388 등 지원 경로를 안내한다.

이동형 버스 쉼터를 운영해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편의물품을 제공하고, 필요 시 임시쉼터로 연계한다. 시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지역의 보호 문화를 확산한다.

민·관 합동 점검은 13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시와 5개 자치구, 경찰, 감시단 등 54명이 학교 주변과 변화가, 유흥가 등 밀집 지역을 돌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주류·담배 등 유해물품 판매 행위, 불건전 전단 배포를 살핀다.

현장에서 음주·흡연·가출 등 위험에 놓인 청소년이 발견되면 즉시 상담과 보호조치를 병행해 쉼터로 연결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